

光州日邦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 —8111 kwangju.co.kr 제20499호 1판 (음력 4월 22일)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참여정부 대형 문화 국책사업 이명박근혜 정부 홀대로 축소 문재인 정부가 정상화 시켜야



문재인 시대 광주·전남 현안 점검

<3> 쬬문화중심도시 2.0 시대

조직·위상 축소된 추진단 복원 7대 문화권 사업 국비 70%로 사업비 구조 재편·특별법 연장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2.0 시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기대는 남다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조성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홀대받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한·미 정상회담 6월 말 워싱턴서 개최

한미 양국이 오는 6월 말 미국 워싱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데 합의했다.

광주 지역민의 여망은 조성사업 정상 화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 으로 압축된다. 조직·위상이 크게 축소 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복원 이 첫 손에 꼽힌다. 조성사업을 총괄하 는 문화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 단은 '미니 조직'으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한 부서 통·폐합조치로 문화콘텐츠 산업실의 일개 과로 편입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차관보급 직위였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과장급으로 격하됐고 지난 2011년 총정원 72명이었던 직원도 10여명으로 줄었다. 사업비 5조3000억원 규모의 방대한

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

(TF)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윤

회동에서 미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

일 도발과 관련, 확고한 대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

하기 위한 양국간 공동노력을 강화해나

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조성사업을 이들이 맡고 있는 셈이다.

조성사업의 핵심 현안인 7대 문화권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이 사업은 광주 전역을 문화전당권(동구), 아시아문화 교류권(남구), 아시아 신과학권(광산 구), 시각미디어문화권(북구) 등 7개 권 역으로 나눠 문화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프로제트다

하지만, 문화전당처럼 '아시아문화중 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건립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사업에 활 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단지, 7대 문화 권 조성사업은 느슨하게 문화중심도시 기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의 또 하나 걸림 돌은 재원 배분 비율이다. 정부에서 지원 하는 국비와 광주시가 분담하는 비율이 5대5 대응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재원을 편성해도 재정형편이 열 악한 광주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 이다. 광주 시민·문화단체는 이런 사정 을 들어 국비 지원비율을 70%까지 올려 달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비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조성사업의총 소요재원은 5조3000억원으로 국비 2조8000억원, 지방비 8000억원, 민자유치 1조7000억원으로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구조상 막대한 민자유치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재원으로 돌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3면으로 계속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또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공동 방

안을 추가로 모색하기로 하고 양국 정

양국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

적 목표이고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

든 수단을 동원하며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가 가능하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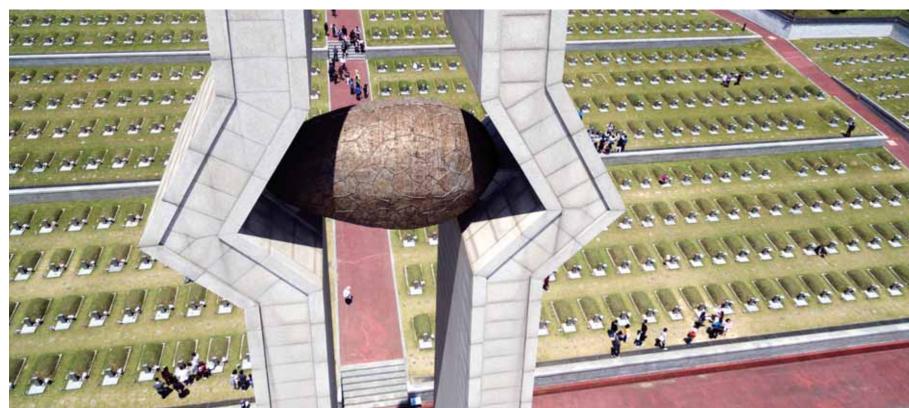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실

용적인 한미간 공동방안을 모색한다는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상간 비전에 대한 공통점을 확인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1만여명이 제창한다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앞두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40m 높이 5·18민중항쟁추모탑의 알모양 조형물은 당시 민주 화를 위해 싸우던 이들의 부활을 상징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통령 기념식 참석…5월 광주 '들썩'

내일 5·18 37주년 ··· 높아진 위상에 역대 최대 규모 행사 오늘 유족회 주관 추모제 봉행 ··· 금남로에서 전야제 열려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되는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 인원이 최소 1만명을 웃돌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5·6·7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통령 기념사, 5·18단체 경과보고, 참석인원 등 기념식 형식과 규모 등 명실공히 역대급 위상을 갖추

고 치러질 것으로 보고 문재인 정부는 만반

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5·18기념식 참석 인원은 최소 1만명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이 참석할 것으로 16일 현재 파 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14 일께 올해 기념식 참석인원을 4000명 수 준으로 보고 청와대와 행사를 준비해왔 다. 그러나 이번 기념식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행사인데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주정부 시절 형식을 되찾으면서 5·18단체 회원은 물론 광주·전남 지역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각 기관 대표자 등 이 앞다퉈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보훈처에 밝혀오고 있다는 것이다.

참석 인원이 예상을 뛰어넘고 보훈처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고민에 빠졌다. 기념 식 장소로 쓰이는 추모탑 앞 광장에 들어 설 수 있는 인원이 최대 4000명(의자)으로 비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18민주묘 지 곳곳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의자를 배치해야 하는 등 행사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행사인데다 문 대통령과 기념식에 대한 국민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행사를 알차게 구성하 고 경호에도 빈틈이 없어야한다는 점을 고 려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훈처는 예년 과 달리 기념식 2일 전까지도 기념식 식순 등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기념식이 5·18유공자와 참석자, 국민 모두의 눈높이에 맞도록소홀함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기념식에 앞서 17일 오전 5·18민주묘지에서는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주관으로 추모제가 봉행된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밤10시30분까지 금남로 일원에서는 518전야제를 포함한 전야행사가 진행된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우원식의원(서울 노원 을)이,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이 16일각각 선출됐다. 〈관련기사 4면〉

각각 선물됐다. 〈관련기사 4년〉 신임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 당을 진두지휘하며 협치와 견제 등을 통해 정치적 했어 행격에 나눠야 하다

정치적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친문 핵심'인 홍영 표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비문계인 우 의원이 당선된 것은 당·청 간의 균형과 야 당과의 협치 필요성이 크다는 여론이 비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의 최대 과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 4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율하느냐다.

광주 4선인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도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전북의 김관영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 존재감을 살리고 대선 패배의 충격에 빠진 국민의당을 재건해야 하는 과제가 쥐어졌



으위시 위내대표 기5

다. 특히 차기 지도부 선거 때까지 당을 안 정시켜야 하는 책무도 안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